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태희



“민심이 천심!”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대선 직후 결과를 전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 ‘자기 혁신 없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 불만일지 모르지만 ‘이유 있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 한 것은 패배진영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천심은 옳은가 그른가

하지만 경향신문 김철웅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민심 천심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두 외국 사례를 들었다. 러시아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관계집회를 강요하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푸틴이 압승했다. 경제 덕분에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태국에서는 쿠데타 군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농민 빈민들이 부패혐의의 탁신을 지지하는 정당에 표표를 주었다. 집권기간 동안 무상의료와 저금리 대출 등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민심이 과연 천심인가 의문을 제기한 것

은 민심이라고 무조건 정당시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였다. ‘사기열전’ 첫 이야기인 ‘백이열전’에서 사마천은 묻는다. “하늘의 도란 도대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天道是耶非耶)”

‘민심 천심론’을 접하며

우리는 하늘(天) 아래 작은 존재로서 겸손해진다. 하늘은 공명정대한 그 무엇을 상징한다. 그런데 사마천은 역사를 통해 세상일들이 공정하지 않음을 보면서 하늘의 이치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품었던 것이다. 사마천이 ‘민심 천심론’을 접하면 무어라 할까. “하늘의 마음은 도대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라고 묻지 않았을까. 천심이든 아니든, 옳든 그르든, 민심을 말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선 우리 정당들이 민심을 효과적으로 정치에 반영하고 선거가 정치적 선택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상황이었다. 선거에 드러난 것만으로 민심을 단순하게 단정 짓기 보다는, 민심과 민생을 심층적으로 살피여야겠다.

또한 민심을 말하면서 언론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민심은 민초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의 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개별적 상황들을 깨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민심과 언론은 상호작용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언론이 똑똑해질수록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저자인 버핏의 설명은 이렇다. “보통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분석은 전적으로 언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 언론인이 똑똑해야 사회도 똑똑해진다. 사회가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쟁이와 도둑, 정치인뿐일 것이다.”(워렌 버핏 투자노트·국립증권연구원구소) 우리 언론은 과연 똑똑한가. 97년 외환

위기 직전에 언론은 똑똑했는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언론은 똑똑했는가. 의문이다.

언론이 똑똑하고 공정해야

그보다 더한 문제는 언론이 불공정하다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소유형태나 높은 광고의존율로 인해 구조적으로, 다수인 서민을 대변하기보다 소수의 특권층에 경도될 소지가 많다. 이른바 유력지라고 일컬어지는 주요 신문들의 기득권층 편향은 교묘해지고 체질화되어 있다. 사법권력의 불공평성을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언론의 불공평성은 ‘유전무언 무전유언(有錢無言 無錢有言)’이라 할 만하다. 삼성의혹에 관한 언론의 침묵이나 자제가 그 예이다. 언론이 평소 불공정하다면 민심이 공정할 수 있을까.

민심을 받을 수도 있고 갖출 수도 있다. 여론을 민심을 말한다면, 민심이 정치과정에 잘 반영되고 잘 표현되고 있는지, 민심 형성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공기(公器)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볼 일이다. 그리고 언론 문제는 건강한 언론활동이 주된 해법이라는 점을 덧붙인다.

<다산연구소 기획실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책 서둘러라

광주시의 자치구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북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46만6천181명으로 동구의 11만5천66명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경제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구 불균형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광주시의 인구는 141만 3천444명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지만 자치구에 따라 사정이 달랐다. 구별 인구는 동구와 북구 이외에 광산구 31만1천61명, 서구 30만7천72명, 남구 20만9천24명이다. 북구가 5천196명, 광산구가 4천480명이 늘었으나 서구와 남구는 각각 2천290명, 2천720명 줄었다.

문제는 격차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북구의 인구는 동구에서 분구된 1980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나 동구는 도시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인구 격차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격차는 행·재정력과 경제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가장 인구가 적은 동구는 행정기관 기구 축소 기준선인 10만명을 위협받고 있다. 인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나 광역 및 기초의원 수,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주시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 경제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향동과 두암3동의 경제조정에서 드러나듯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반복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동구가 경제조정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북구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면 동구와 북구를 비롯 구간 경제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불균형을 방지하려면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민의 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자치구간 협의에 맡겨서는 성공할 수 없다.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 차질 없어야

광주·전남의 차세대 성장산업에 유망한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건교부, 한국토지공사는 7일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단지’ 조성의 전 단계로 산단단지 수요 및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총 3억원을 부담할 오는 2월 7일부터 6개월여 걸쳐 대상 지역의 산업용지 수요와 주요 유치 업종을 제시하고 산단단지의 개발 방법 및 지원 방법,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용역은 국토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대상 지역은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 일원 1천65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은 양 시·도의 산업기반을 융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산업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지속 발전이라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전남이 생산도시로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이 전국 최초의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공동국가산단도 조성되면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첨단 과학산단 및 대불산단 등 양 지역의 국가산단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산업용지 수요를 위해 새로운 국가산단 조성은 당연하다.

광주와 전남도는 용역 과정에서 공동산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산단 유치를 위한 양 시·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빈틈 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산단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달 20일 LG필립스LCD 권영수 사장은 흰색 티셔츠 차림에 색스폰을 목에 걸고 회사 송년회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중가요 ‘광화문 연가’와 ‘나같은 건 없는 건가요’ 2곡을 멋들어서 부른 것이다.

예고가 없었던 사장의 깜짝 연주에 직원들의 반응은 열광 그 자체였다. 그는 직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한 달 가량 남몰래 연습에 매달렸고 이날 솔씨는 다소 서툴렀지만, 효과 만점이었다.

LG CNS 신재철 사장은 지난달 28일 하 루종일 분사 24층부터 3층까지 모든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감사를 표시하고 격려하는 종무식을 했다.

열린 경영을 표방하는 이 같은 그의 종무식은 지난해로 세 번째였다.

남중수 KT사장은 종무식과 시무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취임 이후 3년째 형식적인 연말행사 행사를 건너뛰고 현장과 지사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한다. 그의 지론은 ‘종무식, 시무식 때 가는 해, 오는 해 말만 바뀐

했다 얘기 하고 또 하면 직원들이 좋아하느냐는 것이다.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출근 후 공장을 방문, 직원들의 애기를 듣고 격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까지 강당을 모아놓고 산년사를 했지만 올해는 그것이 시무식의 전부였다. GS칼텍스도 춤추고 노래부르는 축제 같은 시무식을 했고 커피 전문업체인 스타벅스

스카피코리아는 향긋한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는 ‘커피 테이스팅’으로 시무식을 대신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형식을 탈피하고 현장 직원들을 떠안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 모두, 업

계의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거나 최

를 향해 질주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형식탈피와 실용을 강조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다짐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하는 대목이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S리더십



NGO 칼럼

정환담



대선 이후 이 고장 시민단체들의 고요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다수 득표한 후보의 낙선으로 국정예의 관심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대선이건 총선이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국민의 수임기관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국정의 총책임자이며 국가 원수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시일초도 국정 최고 수임자로서 공적 소임을 벗어날 수 없다. 또 대통령은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조직원 NGO에 의해 창립되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상의 모든 의병도 독립운동도 학생운동도 5·18민주항쟁도 모두 NGO운동의 과정과 결과이다. 평상시 NGO는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사회의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NGO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국가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NGO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가는 결코 타

오늘 이 곳의 NGO를 생각한다

정치가는 정권이라는 절대적 권력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정당 등의 거대 한 조직력을 동원,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권력지향 집단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치적 현명한 지도적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자생적 조직인 NGO는 특히 선거라는 정치적 의사결정 조정과정에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불가결한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NGO란 용어는 UN헌장 중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상 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었던 비정부적 조직이라는 데서 유래했으나 오늘날은 정부의 공식적 영역을 넘어서 경제·사회·교육·문화·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과 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NGO는 UN헌장 훨씬 전에 인류역사 시초에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정도 마을도 사회도 심지어 국민도 그 자생적 민간

고난 사람이 아니다. 정치가는 가장 믿을 수 없고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더욱이 절대권력을 갖본 사람일수록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철칙이다. 정치는 철저히 주권자가 감시해야 하며 또한 정치가의 과실은 다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는 NGO적 훈련 과정을 통해 민주적 합의와 협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정치를 지망하는 이들이 평등한 출발을 통한 권력 창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병폐를 고치는 역할을 NGO가 맡아야 한다. NGO가 정부와 연계하여 이권단체로 변질되어갈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NGO를 감시할 NGO가 필요해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시대의 건전한 사회지도세력으로 우리 호남의 NGO전통이 부활되기를 소망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 상임대표>

자동차 커버 씌워 세차 물낭비 줄이자

대부분 운전자들은 주유할 때 자동차가 있는 곳을 찾게 된다. 3만~5만원 어치 넣으면 세차를 무료로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주유소는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차 세차기를 설치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세차를 해 본 운전자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물 낭비가 여간 심한 게 아니다. 또 정화시설이 돼있다고는 하지만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인데 유난히 주유소의 자동차 세차기는 후하다는 느낌이 든다. ‘자동차 커버 씌우기’ 캠페인을 제안한다.

주행 중에 비를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하주차장이 아닌 노상 주차 때에는 자동차 커버를 씌우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비 맞을 일이 없고, 겨울철에는 눈·서리를 맞지 않아 외관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몇년 전부터 커버를 사용하는데 세차 횟수가 절반 이상이나 줄었다. 우리가 커버 씌우기를 생활화 한다면 자동차 세차에 들어가는 물의 낭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질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수컷들의 운명



아프리카 보노보 침팬지처럼 이성 동성 간 가리지 않는 복잡한 성관계로 화해를 모색하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무리 동물들은 수컷들 간의 싸움으로 우위를 정한다. 그 싸움에서 진 대다수의 수컷들은, 끊임없이 무리 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 주변을 서성이며 계속적으로 싸움을 건다. 어쩌면 그것은 수컷들에게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이라.

동물들에게 물욕은 없어도 이 권력욕만은 결코 인간 못지않다. 이 사자 속 동물들은 바로 대립하는 파나코 수컷 들이다. 돌이는 비록 철조망으로 휴전선을 달려놓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들이 튀고 튀고 소모적인 싸움을 건다.

그리고 서로 분에 못 이겨 달려보기도 하고 일어서서 키 채기도 해보고 하

다가 허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지쳐서야 싸움을 멈춘다. 한번은 위로 뻗어나 온 철조망에 목이 잘못 걸려 심한 출혈을 한 적도 있는 정말 못 말리는 싸움꾼 들이다.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한 마리뿐인 파나코 암컷 때문이다. 만일 그 암컷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발정기의 사슴들은 한 마리 지배적인 수컷만 무리에 남겨둔 채 다른 수컷들은 모두 격리시킨다. 그럼 그 수컷들에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파나코도 수컷들만 있다면 지금같이 심하게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수컷 동물들의 대부분의 운명은 암컷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충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어린이 동화 성역할 왜곡 심각

유치원 다니는 조카들에게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는데 많은 동화들에서 성(性)을 왜곡한 내용을 보게 된다.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여성상은 아름답고 여리며 수동적인 천사형과 추하고 사악하며 적극적인 악녀형으로 양극화 돼있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 물레바퀴에 찢려 잠든 공주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왕자의 입맞춤뿐이라는 설정은 여성의 수동적 이미지를 극도의 아름다움으로 포장해 여성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심어주는 것 같다. ‘백설공주’도 마찬가지다. 독 사자를 삼킨 백설공주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아무런 노

력 없이 유리관에 누워 구원자를 기다릴 뿐이며 마침 때 맞춰 나타난 왕자 덕분에 손쉽게 행복한 결말에 도달한다.

반면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마녀는 세 번이나 독으로 백설공주를 위협한다.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계모는 두 아이를 산 속에 버리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계모의 계책을 막기 위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아버지는 동화 속에서 조금의 잘못도 추궁받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화가 이처럼 불균형적 성 역할을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유인숙·광주시 북구 화암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재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2,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8),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